

국민생명 지키기
3대 프로젝트

산업재해를
획기적으로 감축시켜
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
지키겠습니다



고용노동부

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

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
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

Chapter

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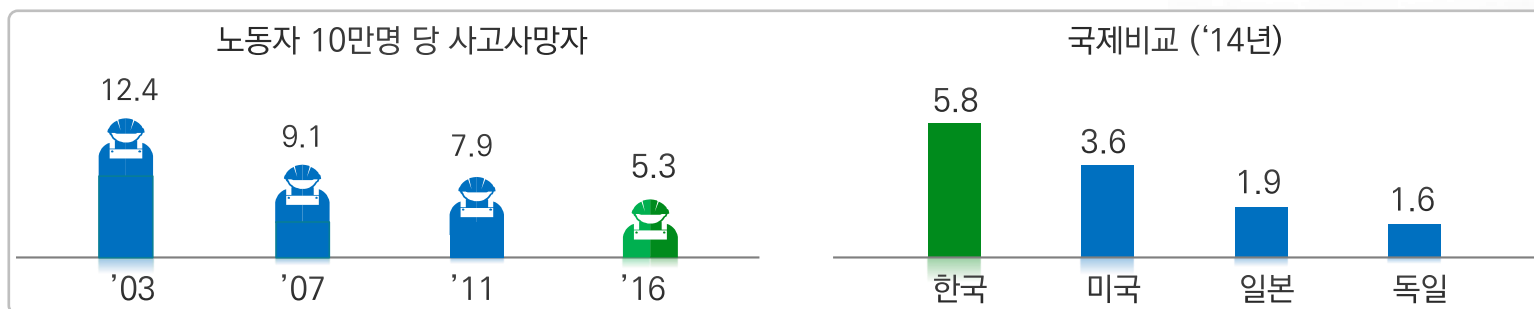
산업재해 현황 및 감축목표

- 1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
- 2 현장의 목소리
- 3 산업재해 감축목표와 추진방향

1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

☑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로 연간 천여명 사망('17년 964명), 경제적 손실 약 21조원

☑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수는 일본,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~3배 높은 수준



☑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·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, 산재감소 대책 발표

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('17.8.17)

- 발주자·원청 안전관리 책임 강화
-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
-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등

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('17.11.16)

-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
- 원청·임대업체 등 안전관리 책임 강화
- 사고발생 시 제재 강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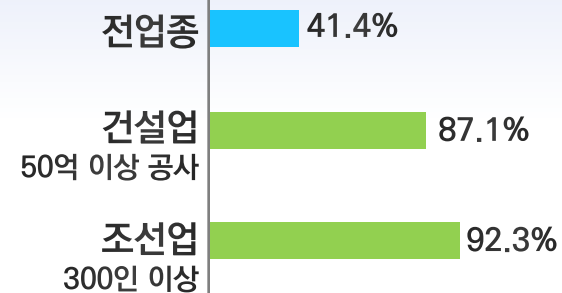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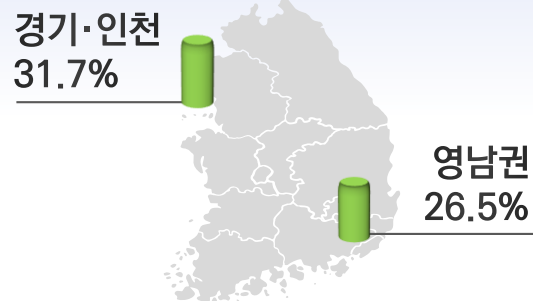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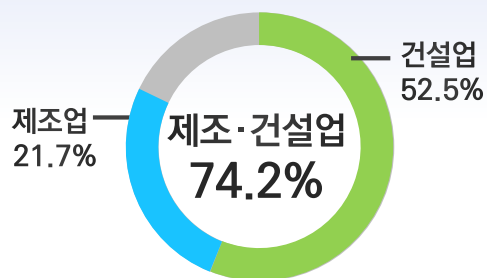
1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('17년 기준)

전업종

건설업·제조업 74%

경기·인천·영남지역 58%

하청노동자 비중이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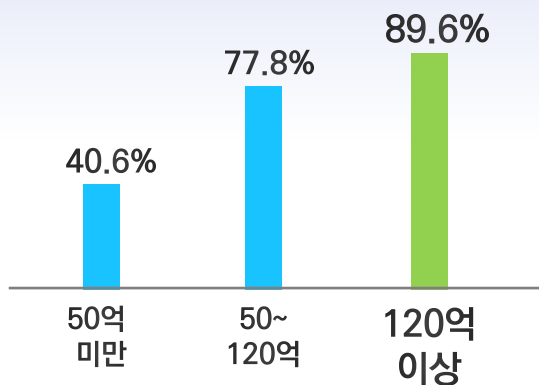
건설업

대규모 공사 하청 高

추락사고 61%

취약시기·주말 사고 多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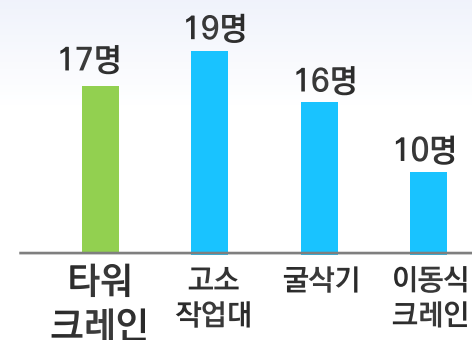
기계·장비 사용 중 사고 多



떨어짐 (61.2%)

- 동절기, 해빙기 34.3%
- 토요일 25.7%
(동시 2명이상 사망사고)

* 사망자의 20%가 기계장비 사용 중 발생



2 현장의 목소리

지난해, 17일간 전국 10개소에서 ‘현장노동청’ 운영 (‘17.9.12~9.28)
인천 등 경기지역은 건설업, 통영 등 경남지역에서는 조선업 관련 의견 다수 접수



산재가 발생했을 때
사업주의 책임을 더 강하게
물어주세요.

건설현장에서
보호구를 잘 안 씁니다.
감독해주세요.



영세사업장에 대한
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합니다.

아무리 얘기해도 안전수칙을
지키지 않는 노동자를
단속해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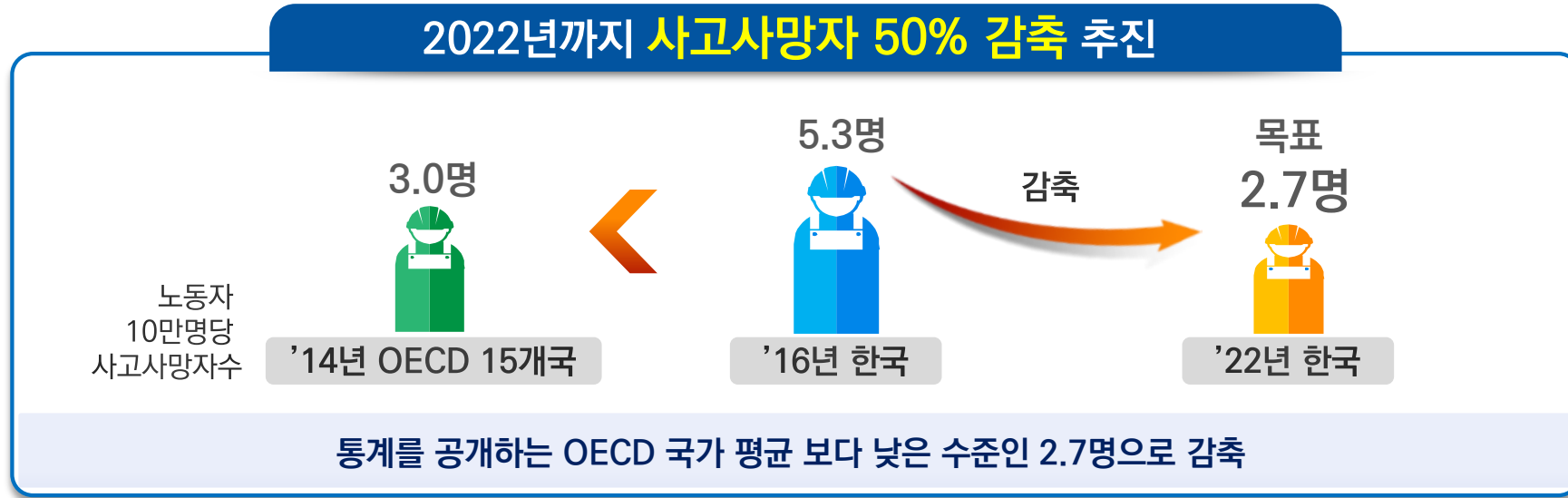


설계 단계부터
안전을 확보하기 위한
제도가 필요합니다.

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
안전교육이 강화
되어야 합니다.

→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높은 수준

3 산업재해 감축목표와 추진방향



산재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

- 발주자·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위험 현장을 집중 관리하여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 할 필요



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

- 안전을 고려하여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인식을 제고할 필요

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

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
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



중점 추진과제

- 1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 명확화
- 2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
- 3 현장 안전관리 강화
- 4 안전기술 개발과 안전중시 문화 확산

1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 명확화

발주자의 책임

• 건설기획·설계단계에서 노동자 안전 고려



- 적정공사비 책정
- 적정 공사기간 반영
- 설계자·시공자에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

• 법 개정 이전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, 공공발주기관 우선 적용



• 공공기관 등 경영평가에 산업재해 예방활동 반영 (안전조직, 인력, 안전 투자비용 등)

원청의 책임

•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



추락 등 22개
위험장소



원청 관리 下
모든 장소

•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원·하청 동일 처벌

- 1년 1천만원 → 5년, 5천만원이하
(사망 사고는 1년 이상 7년, 1억 이하)

• 高유해·위험작업 도급금지

- 도급작업, 수은·납·카드뮴 제련·주입·가공작업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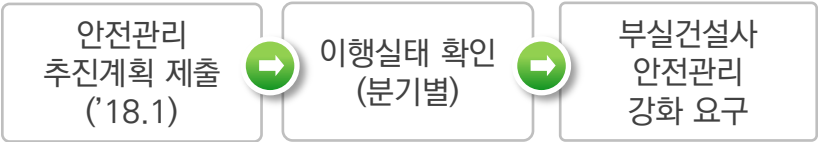
→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추진 ('18.2 입법예고)

2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

▶ 사고사망자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사고 예방

안전관리 역량 강화

■ 사망사고 20% 목표관리제 확대 (50대⇒ 100대 건설사)



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



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과 관계 없이
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상하고, 투명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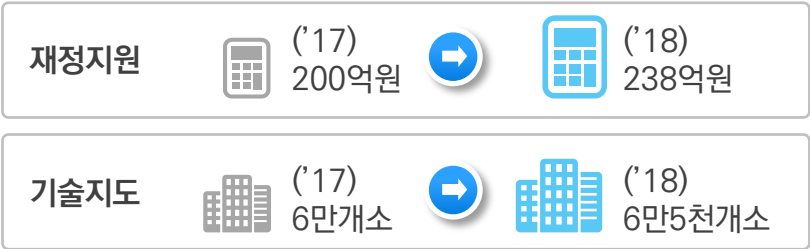
■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('18~)

현장 지도·감독

■ 취약시기(동절기, 해빙기) 및
추락 등 위험요인별 집중 감독



■ 소규모현장 재정지원 및 기술지도



■ 주말에 굴착 등 고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제출
⇒ 계획서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 지도

2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

▶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등 기계·장비 관리 강화



■ 상반기중 작업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부여를 위한 제도개선

원 청	임대업체	설치·해체업체
작업감독자 및 전담번호 배치	설치·해체과정 영상기록	등록제 및 자격제도 도입

■ 전국 설치·해체팀(120여개)별 전담감독관 지정·밀착관리

국토부 ▶ 적정비용 확보, 임대계약 적정성 확인절차 마련 등 개선방안 마련 ('17.12~)



■ 제조자에게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

■ 사업주 책임 강화 및 조작자 안전의식 제고

• 미수검·불합격 장비 과태료 상향(50 ⇒ 500만원), 조작자 교육과정 신설

국토부 ▶ 기중기 등 조작자 보수교육 신설, 유압실린더 등 주요 부품 검사기준 강화 ('18)

2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

위험작업이 다수 이루어지는 조선·화학업 사고 예방



❑ 원·하청 안전보건 활동수준 평가 ⇒ 미흡 기업은 감독 등 집중 관리

❑ 원청은 원·하청 노동자에게 안전관리비용 투자계획과 집행내역 공개

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확대: 건설업 → 조선업 ('18.上)

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

원하청, 안전보건제도 등 4개 분야에서 조선업종 사고의 기술적·구조적 요인 조사
결과 발표('18.3, 공청회) → 제도개선('18.下)



❑ 고위험 화학공장 밀착관리

공정안전관리
(PSM, Process Safety Management)

• 사업장 안전조치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강화 (P-S-M 등급)
* 최하등급 사업장 점검주기 단축, 점검기간 확대

전담·전문 감독

•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속 화공·기계 등 전문감독관이 감독
* ('17) 6개소 37명 → ('18) 7개소 71명

❑ 정비·보수 등 정기적 위험작업과 돌발 위험작업 타겟 관리 (기술지원·점검)

3 현장 안전관리 강화

현장을 변화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감독 실시

사전 예방하는 감독

- 사전예고 + 자율개선 기회 부여 후, 부실현장 불시감독
- 법령 상 의무사항, 기술적 사항
+ 협력업체 지원 등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지도

실효성 있는 감독

- 선정이유, 감독 내용 등 노사에게 설명, 유해·위험요인 청취 ⇒ 감독에 반영
- 노사에게 위험요인 및 법 위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속한 개선 유도

전문성 있는 감독

- 기술직 감독관 비율 확대('17년 40%→ '21년 60%), 신규감독관 교육 강화
- 지역 특성에 맞는 감독 실시 (예) 부산: 조선, 경기: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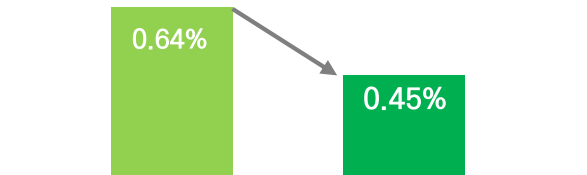


3 현장 안전관리 강화

노사가 참여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

위험성평가 및 개선

노사가 함께 공정별 사고 위험요인을 파악·평가하고, 자체 개선(위험성 평가)


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전후 재해율 변화

노동부 감독 및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 시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확인

사업주와 노동자의 역할

사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

사업장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노사가 함께 준수

사업주 준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호장치 점검 등
노동자 준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조치사항 준수

안전보건수칙 포스터 보급 및 게시여부 등 점검

위험상황 신속 대처

노동자는 긴급대피,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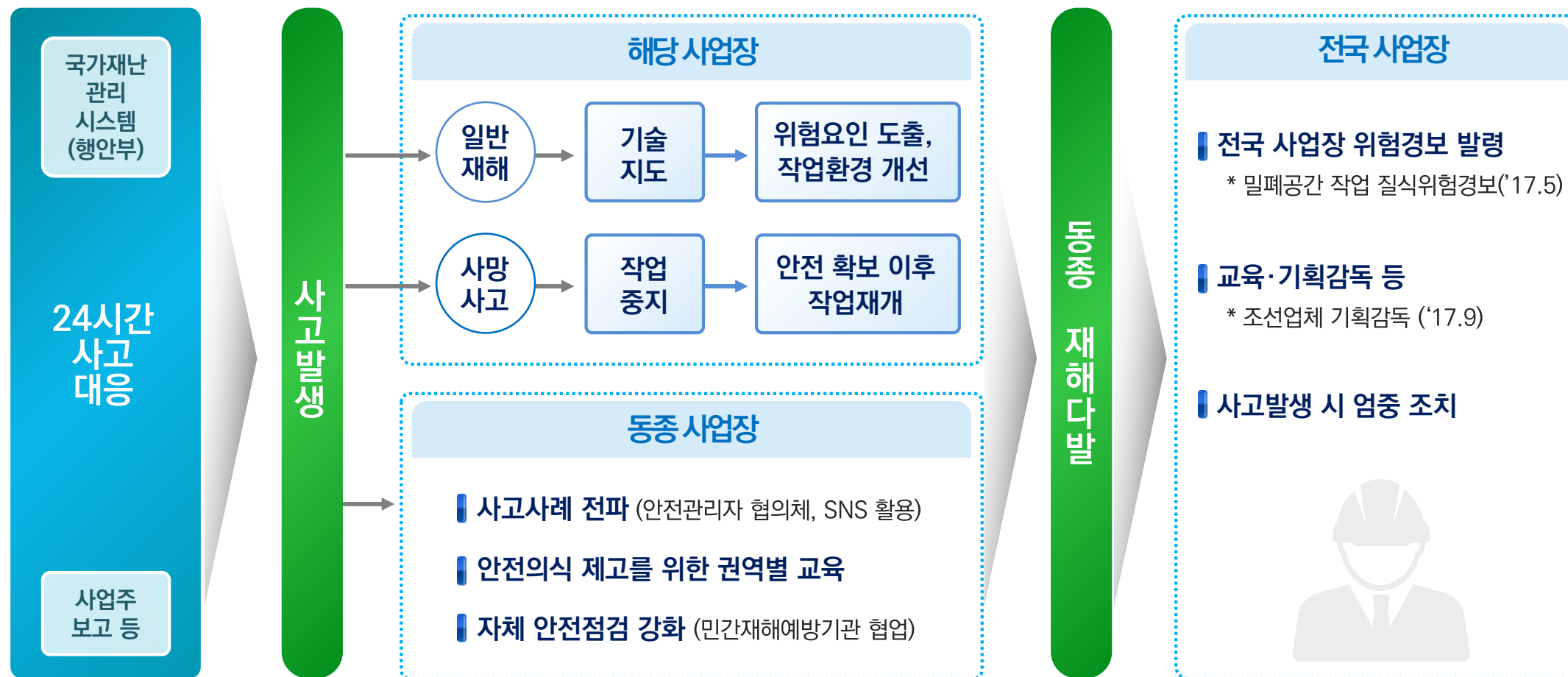
* [위험상황 신고] 안전신문고 앱(행안부), 위험상황 전화(노동부)

⇒ 산업안전보건법에 요건 및 불이익 조치 시 처벌 명확화



3 현장 안전관리 강화

사고발생 시 즉시 대응, 유사재해 예방



4 안전기술 개발과 안전중시 문화 확산

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장 보급

현장 수요를 반영한 안전기술 개발



안전 제품 사용·확대 지원

■ 산재다발 분야·유형 분석
⇒ 안전기술 개발과제 도출

* ('18) 밀폐공간 사고예방을 위한 침단기술 활용방안 연구

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개발 지원 (과기부)

* (예) 로봇 등을 활용한 위험물 안전진단 기술

■ 50인 미만 사업장
⇒ 적합 안전장비·시설 설치비용 지원

■ 지원품목에 포함된
산업안전제품 검색·비교
사이트 활성화



■ 안전산업 정보 공유 통합포털 구축 (행안부, '19)

안전기술 적용사례



· 가스센서, SOS 버튼 등이
장착된 스마트안전모



· 송·배전 작업 시 활용 가능한
Smart Stick 작업 공법

4 안전기술 개발과 안전중시 문화 확산

▶ 범국민 안전인식 제고 및 사업장 안전중시 문화 확산

추락재해 획기적 감축 위한 범국민 캠페인 지속 전개

- ‘추락재해! 반으로 줄입니다.’ 등 일관된 슬로건으로 최소1년 이상 장기 집중 홍보
- * 방송캠페인 집중 송출, 생활·온라인 등 매체별 연계 홍보

10분

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
작업 전 10분 안전교육 생활화



안전마인드 확산

- 최고경영자 참여하는 업종별 안전보건 리더회의
- VR(가상현실)을 활용한 실감나는 교육

자치단체·노사가 참여하는 대대적 캠페인 및 안전점검

자치단체

- 서울시 “우리동네안전감시단” 구성 (17.11~, 노동부와 MOU)

노사

- 4일: 안전점검의 날
- 14일: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의 날
- 24일: 기계·장비 점검의 날



국민의 생명과 안전을
지키기 위해 혁신하겠습니다

감사합니다

